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09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6월 25일 (음력 5월 22일) 수요일

광주 기아차 운송 협상 타결

수출 한 고비 넘겨 … 노조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다시 위기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완성차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분회와 화주측의 협상이 2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관련기사 3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카캐리어분회 파업이 12일만에 타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완성차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그러나 노조가 26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따르면 카캐리어분회는 이날 오후 현대·기아자동차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합의한 최종 협상안에 합의했다.

카캐리어분회는 전날 목포항 27%·군산항 25%·평택항 22%(+α) 운송료 인상이 포함된 협상안을 1차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지만, 반대 44명대 찬성 20명으로 부결시켰었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글로비스는 부결 직후부터 재협상에 돌입해 기존 운송료 인상분에 추가로 ▲장거리 수수료 면제 ▲완성차 상·하차 문제 개선 ▲화물연대·글로비스·운송사 3자 협의체 구성에 최종 합의했고, 카캐리어분회 조합원들도 이를 통과시켰다.

최종 협상안에는 또 유가연동제 도입을 추후 협의하는 것과 이면 합의된 내용을 9월30일 이전에 재협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아차는 26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예정돼 있어 또다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있어 상위노조인 금속노조의 대각선 교섭, 민주노총 총파업 등과 맞물려 노조의 투쟁 강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공장 관계자는 "26일로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오는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에 따라 기아차 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까지 18년 연속파업을 이어갈 경우 2년 연속 적자탈출은 물건너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모두가 힘을 모아 신차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남홍 기아차 사장은 24일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연례파업의 관행, 2년 연속 적자 상황을 올해는 새롭게 바꿔봅시다'라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종태·안현주기자 jtlee@kwangju.co.kr

"한우고기를 먹읍시다" 광주축협이 주최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다짐대회'에서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축산사랑'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광주축협은 2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한우직매장 2호점에서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李대통령 "불법 시위 엄정 대처"

검·경 "폭력 시위자 현장 체포"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정부조치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훼손된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가두시위에 대해서는 폴리스 라인 등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법질서를 회복하기로 하고 장기간 도로점거,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검·경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선동과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어 청장은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또는 경찰 진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불법시위 선동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칙 어긴 학생 부모들 학교 나와 청소하세요"

광주 모 중학교, 10명에 봉사활동 시켜

교칙을 위반한 자녀와 함께 학부모도 학교에 불려가 교내봉사활동을 한다면 사실상 연대처벌인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묘책인가.

광주의 한 중학교가 교칙을 어긴 학생들의 부모를 불러 자녀들과 함께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자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S중학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최근 학생들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는 등 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 학교 2학년 A(14)군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두 13명의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학생 부모들을 학교로 나오도록 해 자녀들과 함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교내 봉사활동에는 해당 학부모 13명 중 10명이 참여했으며, 자녀의 징계수위에 따라 3일~5일동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들은 매일 오전 8시20분부터 8시50분까지 30분동안 교내 계단청소와 휴지줍기, 제초작업 등을 분담해 봉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13명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30분동안 교실 청소와 휴지줍기 등 교내 청소를 했다.

S중학교 측은 또 따른 광주 S중에서 실시 중인 학생·학부모 간 연대책임제의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교칙을 어긴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교내봉사활동 명령을 내렸었다.

학교측은 "이같은 결정이 교칙을 어긴 학생의 경우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자신으로 인해 부모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학생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대 책임에 대한 반론도 있다. 광주지역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교내 생활지도에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전근대적 이며 교육적이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광주 S중학교 관계자는 "교칙위반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다 "며 "부모 참여에 대해 강제성은 없고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 봉사활동을 마친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7월부터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관련기사 3·4·8면〉

이와 함께 소 내장 등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해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구이·찜·탕·생식용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을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놀이방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 등의 급식소는 50인 미만이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제 초기 정착을 위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부터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쇠고기 검역 지침도 강화된다. 특정위험물질(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된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쇠고기 추가협상을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시점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고시의 관보 게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